

정책세미나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는 2010년 5월 13일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육아실태와 지원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9년부터 3년차 일반과제 연구로 진행되고 있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장명립 연구위원)의 1차년도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일반 저소득층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을 포함하는 취약계층 가정 지원 정책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육아의 어려움과 실태 및 요구를 고려한 취약계층 가정유형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정부부처 사업들 간의 연계·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육아실태와 정책 방안」

장명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종합토론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강복정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팀장

김선희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새터민 정착지원센터 부장

전우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전연진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팀장

일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사업」)과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

달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드림스타트사업」은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드림스타트 센터가 설립되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의 건강·보육·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복투사업」은 2009년 현재 전국 879학교를 거점으로 교육·복지·건강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지원사업(이하,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0여명의 희망유아교육사가 배치되어 발달지연 유아 및 기관 미이용 유아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사업으로는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 대책」 정책을 발표, 추진해 오다가 현재는 여성가족부로 주부무처가 이

관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100여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사업 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취업·창업교육, 자조모임,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의 다문화가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복지대책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이중언어 강사 배출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70개 초등학교에 이들 강사를 배치하였으며 올해는 그 대상을 유치원의 유아로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 중이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사업으로는 통일부가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하나센터 사업이 있다. 하나원 이후의 거주지에서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추진된 하나센터사업은 거주지에서 초기 적용 및 취업·진로지도 등 종합적인 정착 지원을 통해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을 실시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1) 전입초기 지역사회 이해교육 2) 지역주민 교류 및 적응력 향상 3) 취업지원, 진로·진학상담 등 자립·자활 기반 조성 4) 의료연계 및 심리상담 5) 가족문제, 법률문제 등 개인적인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이 있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첫째로 정부지원사업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실태 및 요구 관련 조사이다.

드림스타트사업, 교복투 사업,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 등 3사업의 지원대상 가정 중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 총 459명과 일반 저소득층 가정 210명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자녀 관리 및 지도, 교육·보육실태, 양육의 어려운 점,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등을 알아보았다. 정부지원사업별로는 가정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양부모가정이나 한부모 가정보다 조손가정의 영유아들이, 균형있는 식사제공, 인스턴트 음식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제한, TV 또는 비디오 시청 시간 제한, 정해진 취침시간 지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 책읽기, 만들기(그리기), 글(또는 수) 가르치기, 함께 놀이터 가기 등의 교육실태 항목에서도 양부모가정과 한부모 가정은 각 응답이 비교적 고르게 나왔으나 조손가정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통해 조손가정의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양육의 어려움에서는 양부모가정은 교육·보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은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가족 유형에 따른 지원이 다르게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해서 양부모가정은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의 확대(48.7%),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12.8%), 국공립 교육·보육기관의 확충(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부모가정은 유아교육보육비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도(38.5%)가 가장 높

았고, 아동대상 바우처 서비스 확대(13.3%), 교육·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12.6%) 순이었다. 조손가정은 유아교육보육비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도(58.8%), 영유아발달계좌(16.7%)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로 다문화 가정 육아실태 및 요구관련 조사 결과이다.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보면, 가족구성은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이 68.9%로 가장 많았고, 조부모와 함께 2대가 함께 사는 가족이 18.9%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가구소득 수준은 모름이 31.9%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특이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차상위층(19.9%), 5층(12.7%), 국민기초생활수급층(12.0%)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횟수를 알아본 결과, 책 읽어주기, 노래 부르기, 만들기나 그리기, 글자 및 수 가르치기, 게임하거나 놀이주기, 놀이터에 가거나 신체 운동, 우체국이나 은행이나 상점에 가기 및 집안 일 하기 등 모든 활동에서 주 1~2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만들기나 그리기, 게임하거나 놀이주기 및 집안일 하기는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각각 28.9%, 31.3% 및 35.7%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문화가정에서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은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유치원 확충(13.7%), 종일제 프로그램의 내실화(9.3%), 유아교육 지원 사업 확대(9.3%), 유치원 서비스 질 향상(8.4%)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서

울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인천 부평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의 협조를 얻어 가구명단을 확보하여 실시하고 부모 167명이 설문조사에 응한 북한이탈주민 가정 육아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이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그 어느 가정유형보다도 빈곤한 것으로 결과가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가정의 88.6%인 대다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층이었다. 또 가구소득 수준을 기준할 수 있는 부모의 취업현황에서 어머니의 93.4%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아버지도 절반이 넘는 54.5%가 직업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기준 월평균 급여수준도 상당히 낮은데 51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3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소수의 취업모의 월평균 급여도 5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결혼 상태가 그 어느 집단에 비해 복잡하다는 것이다. 탈북 이전에 가정을 꾸리더라도 탈북 이후 남한 입국까지 또 다른 배우자와 동거 내지는 결혼을 하는 사례도 많으며, 남한 입국 이후에도 다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결혼 상태가 존재한다. 가장 많은 결혼 상태별은 제3국에서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2.8%로 가장 많았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결혼 상태는 어느 집단에 비교해 보더라도 복잡하다. 탈북 이전에 가정을 꾸리더라도 탈북 이후 남한 입국까지 또 다른 배우자와 동거 내지는 결혼을 하는 사례도 많으며, 남한 입국 이후에도 다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결혼 상태가 존

재한다. 가장 많은 결혼 상태별은 제3국에서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2.8%로 가장 많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77.8%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아동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도 60.5%로 높게 나왔다. 자녀 발달에 있어 걱정되는 영역이

없다가 48.3%로 가장 많았다. 우려되는 영역으로는 신체발달영역(18.0%)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를 원하는 육아지원서비스를 묻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양육비 보조(62.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게 나온 것은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13.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

〈표 1〉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영역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공통 지원	- 기본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지속적 확대 - 육아지원기관의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기본학습 지도 지원, 특기적성 및 방과후프로그램 제공 - 부모교육을 위한 방문 교사의 가정 방문 프로그램 제공 (유아교육·보육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이용한 소집단 교육 방안 모색 가능) - 정부 부처의 취약계층 지원사업내실화 및 지역내 부처의 사업 연계 지원(인력 및 프로그램 등)				
유아 및 부모 특성	- 유아의 기본 학습 능력발달 및 언어, 정서 미흡 - 부모의 자존감저하 - 가족간 유대 악화	- 정서, 사회성, 신체 발달 우려 - 부모-자녀 함께 하는 시간 부족 - 가족간 경제책임 부담	- 문화, 놀이활동 - 가장취약 - 우려 - 부모의 기본적인 및 낮시간 부모 프로그램 참여 어려움	- 문화이해 부족 - 의사소통 문제 - 정서, 언어 발달 - 언어, 인지 발달 - 부모의 기본적인 우려 - 자녀 도 활동 조부 - 자녀 도 활동 조부 - 자녀 도 활동 조부 - 건강, 생활지도 - 모가 거의 못함	- 신체, 사회성 달 우려 - 부모 사용 언어의 이질성 - 선입견으로 인한 부적응 및 복잡한 가족관계, 양육방식의 차이, 부모직업의 불안정성 - 건강,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 미흡
프로그램 지원	- 가정 및 가족 기능 회복 지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원 - 크 및 지원 연계 · 지원	- 유아의 정서 순화 및 기초 학습지도 - 부모 자신의 정신 건강 및 양육역할 강화	- 인지 학습지도 및 기본 생활 습관 - 성인동반활동, 문화체험 -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및 지도 방법	- 유아 한국어 지도 및 유아 종합발달 지원 프로그램 - 부모 역할 강화 - 문화체험 및 학습 지도 및 정보·자료 제공	- 자녀 학습지도 정보·자료 제공 - 일반적 사회적 지원 및 부모 역량 강화 지원
인력 지원	- 기본적인 발달지 원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 방과후 보호·학습지도 인력 지원	- 방과후 학습지도 인력 지원	-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 지원	- 탈북기정 취학전 영유아 양육 및 지도 전문 담당 인력 지원

소식마당

해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육아지원으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도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 가정의 통합적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 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돋고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발달정도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적 배려와 더불어 건강, 안전, 영양 및 정서적 안정 등에 관련된 종합적인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

둘째, 저소득층 가정 부모의 정신건강과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유아를 위한 양육기술 및 정보 지원은 물론 부모 자신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또한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층 가정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겠다. 본 연구소의 조사에

서도 가정 및 가정의 유형별(양부모, 한부모, 조

손가정, 다문화가정 등)로 자녀양육실태와 정책 지원 요구가 다르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가정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 영유아 지도시의 프로그램의 활동구성, 부모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전달 방식 등이 가족유형에 따라보다 세분화해서 제시되어야 하겠다(표 1 참조).

넷째, 취약계층 가정 지원사업내 전문인력을 위한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하며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 추진의 책임자나 중간 관리자들을 위한 매뉴얼도 필요하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거나 영유아를 지도하지는 않더라도, 취약계

층 가정의 특성, 맞춤형 프로그램의 필요성,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와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 사업이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취약계층 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 및 서비스의 종합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약계층 가정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 사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 또한 필요하다.

소식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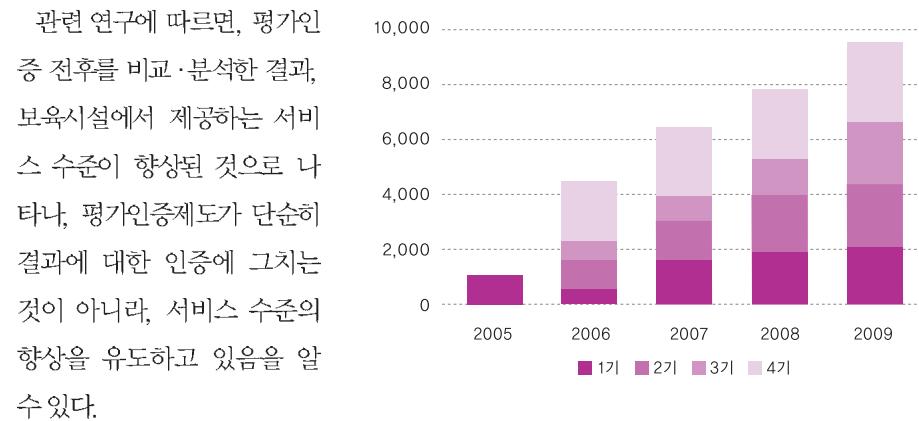
육아정책 소식

제1차 평가인증 종합 결과 발표

– 어린이집 10개 중 6개 평가인증 통과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한 제1차 평가인증 종합결과를 발표하였다. 2005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09년에 실시한 제1차 평가인증에서 전체 어린이집 33,499개소 중 29,084개로(86.8%)가 인증에 참여하였고, 이 중 20,255개소(60.5%, '10. 3월 기준)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그동안 평가인증 참여시설과 인증시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평가인증 참여신청 연도별 추이〉



〈평가인증 통과 연도별 추이〉

